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행정통합 지원을 위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도내용>

- 2026.4.16.(목) 연합뉴스는 「“광주특별시 지원 약속 위반” 정부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면서,
 -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20조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정부는 광주·전남에 약속한 대로 20조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초기 필수소요 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전남·광주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으로 1,000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초과세수와 연동하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증액 교부하였습니다.

* 전남·광주 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 지방교부세(보통): +6,647억원(전남 5,781억원, 광주 866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 +3,971억원(전남 2,549억원, 광주 1,423억원)

-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통합 지방정부의 초기 안착 지원을 위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 현재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통해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	예산실 지방재정팀	책임자	팀 장 박민정 (044-214-3190)
		담당자	사무관 고병국 (kobk22@korea.kr)

